1장

2032 북한선진화의 길

_복합그물망국가 건설

하영선

서론

2012년은 북한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고 천명한 해다. 그러나 현실은 어둡다. 핵선군주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안보 불안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과잉 안보국가의 길을 걷고 있다. 화폐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빈국의 비극을 겪고 있다. 과잉 안보를 위한 과잉 지출에 따라 21세기 선진화의 기본 무대인 문화, 환경, 그리고 지식에 적정 투자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국내외 통치를 주도해 온 선군 수령체제는 김정일의 건강 때문에 불가피하게 후계체제를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김정은 후계체제가 선군(先軍)정치대신 선경(先經)정치의 새로운 길을 추진할 전망도 불투명하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북한은 3중고의 어려움에 직면했다. 국제적으로는 1991년 사회주의 국제질서의 붕괴라는 세기사적 격변을 겪고 국내적으로는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맞이한다. 김정일 후계체제는 인구의 상당수가 굶어 죽는 "고난의 행군"을 치르면서 1998년 21세기 국가목표로서 강성대국 건설을 새로 내걸었다. 그 해 5월 22일 로동신문 정론은 강성대국을 "조선을 이끌어 21세기를 찬란히 빛내시려는 담대한 설계도"라고 밝히고 있다. 인류사

의 수많은 국가와 민족들이 강성과 번영을 추구하였으나 역사는 진정한 의미의 완성된 강성대국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북한은 21세기 강성대국을 위해서 수령중심으로 "사상의 강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튼튼히 세우고 그 위력을 경제건설의 눈부신 비약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장군님의 주체적인 강성대국 방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로동신문〉 1998/05/22).

북한은 1999년의 신년 공동 사설에서 1999년을 강성대국 건설로 전진하는 새로운 전환의 해로 명명한 후 10년이 지난 2010년의 신년 공동 사설에서도 여전히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을 3대 기둥으로 삼는 강성대국 방식을 21세기 생존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궤도에 오른 정치사상과 군사강국에 이어 중공업 발전과 함께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로동신문〉 2010/01/01).

북한은 21세기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1999년 6월 16일 "우리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공동논설에서 "제국주의와 반제자주세력이 가장 격렬하게 맞서고 있는 투쟁의 시대에 제국주의와 장기적인 대결 속에서 사회주의 위업을 달성하자면 마땅히 군사가 중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선군정치를 "우리 시대의 완성된 정치방식이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어서 "선군정치 방식은 바로 군사 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령도방식"이며 "혁명군대의 강화를 통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위를 보장하고 인민대중의 창조적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로동신문〉 1999/06/16).

김정일 체제는 새로운 정치방식으로서 선군정치를 강조하게 된 것을 1990년대 중반 "주체조국을 둘러싼 정세 변화"와 "혁명과 건설 앞에 조성된 류례없는 난국"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세 변화로는 사회주의권의 몰락, 김일성의 사망, 미국의 군사적 위협, 김영삼 정부의 '강경책' 등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이에 따

라 '조성된 난국'으로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대외무역의 70-80퍼센트를 점하고 있던 사회주의 시장이 붕괴함으로써 경제건설에 적지 않은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과 일본의 경제제재는 "국제적인 금융거래의 길을 완전히 차단"하였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고 말리워 버리려"했다는 것이다. 셋째, "몇해째 련속 들이닥친 큰물과 해일, 가뭄 등 파국적인 자연재해"를 들고 있다. 그 결과 "혹심한 식량난, 연료난, 동력난"이 발생하여 북한은 본격적인 고난의 행군을 시작했다. 북한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력사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레닌그라드의 900일 봉쇄를 인류가 당한 가장 참혹한 재난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 처참한 900일보다 훨씬 더 길고 더 잔인한 봉쇄의 나날이 계속되고 한 개 도시가 아니라 온 나라가 통째로 원쑤들의 포위에 든 고립무원한 상태에서 하나의 적이 아니라 사면팔방에서 달려드는 제국주의 련합세력의 공격을 물리쳐야 하는 나날은 아직까지 그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준엄한 날들이었다."(강성길 2002; 전덕성 2004; 김영 2005; 김봉호 2005).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기 위한 선군시대의 개막을 1995년 1월 1일로 잡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선군시대는 1998년에 공식화된다. 1998년 9월 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고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방위원회 중심의 선군체제를 수립했다. 김정일의 국방위원회 추대 연설을 맡은 김영남은 "국방위원장의 역할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력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하고 사회주의 조국의 국가체제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며 나라의 방위력과 전반적 국력을 강화 발전시키는 사업을 조직령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이며 우리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성스러운 중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로동신문〉 1998/09/07).

선군시대의 쇠퇴

21세기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새로운 정치방식으로 선택한 선군정치는 지난 15년 동안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안보, 경제, 정치의 3대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북핵문제의 악순환

선군정치의 최우선 목표는 사회주의 국제질서의 붕괴에 따른 김정일 수령체제의 결사옹위였다. 선군정치는 1994년 제네바기본합의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핵동결과 핵시설 해체의 대가로서 경수로 건설과 중유 공급을 받으면서 미국과 관계개선 협상을 진행했으나, 체제 안전의 마지막 보루로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한편 북한의 핵확산을 막으려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노력은 북미 간의 워싱턴회의까지 진행했으나, 북한의 과잉 안보적 요구 때문에 현실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더구나 2001년 9·11테러를 겪은 미국은 핵확산과 핵테러를 단순히 지구 안보 문제가 아니라 최대 국가안보 문제로서 다루기 시작했다. 북핵문제가 미국과 북한 모두에게 생사가 걸린 싸움이 된 셈이다.

2002년 10월초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의 평양 방문에서 제기된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문제로 제네바합의가 붕괴되고 제2의 북핵위기가 시작됐다. 결국 중국의 중재로 이루어진 6자회담은 2005년에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9·19 공동성명에 일단 합의한다. 그러나 2005년 공동성명의 기본 골격인 북핵의 포기, 경제 지원,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라는 마(魔)의 사각관계는 1994년 기본합의서와 마찬가지 운명을 겪게 된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를 우선으로 하는 핵포기의 일괄타결 방안으로서 경제제재 해제 및 경제지원, 수령체제 옹위를 핵심으로 하는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북미 관계개선에 따라서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검증 가능한 핵포

기를 우선으로 하는 대북 경제 · 군사 · 외교 관계 개선을 강조했다(하영선 2006).

6자회담은 마카오 소재 방코 델타 아시아(Banco Deta Asia: BDA)를 둘러싼 대북 금융제재 속에서 예상대로 이행합의를 마련하지 못했다. 그리고 2006년 10월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했다. 2007년에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3단계인 불능화, 신고, 비핵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결국 신고와 검증 단계에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북한은 2008년 4월에 핵협상 파기를 선언하고 동결과 불능화 조치를 원상복구하고 2009년 5월 25일에는 2차 핵실험을 했다. 북핵문제는 경제제재와 핵실험의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2009년 10월초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의 회담에서, 첫째, "조선반도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둘째, 북미 양자회담을 통하여 북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반드시 평화관계로 전환해야 하며, 셋째, 북한은 북미회담 결과를 보고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로동신문〉 2009/10/06). 김정일 위원장은 2010년 5월초 중국 방문에서 북한의 기본 입장을 그대로 반복했다(〈로동신문〉 2010/05/08).

그러나 핵선군주의의 운명은 시간문제다. 수령체제의 핵무기는 삶의 담보가 아니라 죽음의 담보다. 북한이 끝까지 핵포기의 전략적 결단을 거부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제재는 심화되고 미국과 중국은 핵없는 친중 정권의 등장을 암묵적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9·11이후 대량살상무기 테러와의 전쟁을 안보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는 미국은 어떤 경우도 북핵을 현실로서 인정하기는 어렵다.

경제성장의 부진

김정일 체제는 북한의 21세기 국가건설의 목표로서 설정한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선군정치와 사상, 군사, 그리고 경제의 대국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와 사상, 군사, 경제의 대국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서 필수적이나 상대적

중요성에서 보면 선군정치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군사가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며 마지막으로 경제를 꼽고 있다. 따라서 경제의 논리가 선군정치의 논리와 서로 부딪치는 경우에 경제강국 건설도 선군정치의 틀 속에서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였다(하영선 2000).

국내외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김정일 수령체제의 옹위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북한은 역사적 유례가 드문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도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선군 경제전략을 추진했다. 경공업과 농업이 강조하는 인민경제도 중요하지만 탈냉전이후 사회주의 국제체제의 붕괴와 함께 제국주의의 위협에 생사의 갈림길에 선 수령체제는 국방체체 우선의 논리를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선군경제는 대외적으로는 예속과 자주의 경직화된 2분법적 사고에 기반을 둔 21세기 위정척사적 해결방안을 시도하고 국내적으로는 제한된 자본을 국방공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북한경제가 당면한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없었다. 결국 북한은 2002년 7·1조치와 2003년 종합시장의 설치를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선군경제 우선의 한계 안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1990년 이래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북한경제가 2000년대에 들어서서 낮은 수준의 플러스 성장을 했으나 여전히 1인당 국민소득 5백 내지 천 달러의 세계 최빈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새로운 시도로서 2009년 11월에 화폐개혁을 하고 2010년 신년사에서는 경공업과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선군정치의 국내외적 제약을 벗어나려는 전략적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후계체제의 구축

1994년 김일성의 사망으로 수령체제를 이어받아 유훈통치를 시작한 김정일은 국내적으로는 경제위기, 국제적으로는 탈냉전의 안보위기에 직면하여 김정일 친족을 정점으로 하는 김정일 체제의 생존을 북한의 최고 이익으로 하는 친위세력을 구축했다. 김정일 친위세력은 일차적으로 북한의 혈관에 해당하는 노동당 조직을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의 조직지도부(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행정부장 장성택/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경옥)와 선전선동부를 통해서 수령체제의 옹위를 최우선으로 하는 선군정치와 사상이 모든 당 조직과 활동의 근간이 되도록 만들었다. 다음으로는 수령체제의 생존을 지켜야 할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군부조직이 중요하므로, 인민군 총참모부(총참모장 리영호/작전국장 김명국)와 총정치국(제1부국장 김정각), 호위사령부(사령관 윤정린), 평양방어사령부, 보위사령부(사령관 김원홍)등을 중심으로 군부세력을 장악하고, 마지막으로는 북한 이천만 주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내각 실무관료들을 필요로 했다.[1)]

2008년 8월 중순 김정일 위원장의 급작스러운 건강 악화는 불가피하게 후계체제의 등장을 시간문제로 만들었다. 북한 60년사에서 김일성 체제에서 김정일 체제로의 이행에 이은 두 번째 권력이행이다. 첫 번째 권력이행과 비교하여 충분하게 후계체제 구축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두 번째 권력이행은 훨씬 조심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핵심은 또 한 번의 유훈통치가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21세기 생존전략의 모색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답은 선군정치 15년을 주도해 온 김정일 측근 정치세력이 김정은 후계체제의 새로운 정치권력으로 어떻게 탈바꿈하느냐에 달려 있다.

---

1) 북한자료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MA/).

북한 선진화 공진전략 1단계 : 이행과 개혁

김정일 체제는 북핵문제의 악순환, 경제성장의 부진, 후계체제의 구축이라는 3대 난제를 쉽사리 풀지 못한 가운데 김정일의 건강 때문에 불가피하게 새로운 후계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후계체제의 등장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변환 물살의 속도다. 소련은 과속으로 국가 해체의 비극을 맞았다. 반면에 중국은 속도 조절에 성공해서 오늘의 개혁개방을 즐기고 있다. 북한이 소련과 중국 중에 어느 길을 걷게 될 것인가는 국내외적 현실에 맞는 변환의 속도 조절에 달려 있다.

김정은 후계체제의 최우선 당면 과제는 먹고 살아가는 문제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체제보장과 생계보장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정일 체제의 선군정치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김정일의 선군시대는 "잃어버린 15년"이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북한의 생존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는 과잉안보관에 입각해서 안보의 최후 보루로서 핵무기를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선군정치의 핵정책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체제안보를 보장해 준 것이 아니라 핵실험과 경제제재의 악순환 속에서 오히려 북한체제의 죽음을 보장하는 안보딜레마를 안겨주었다. 따라서 김정일 후계체제의 새 정치세력이 선군정치를 넘어 선 21세기 생존전략을 새로 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급한 것은 북핵문제의 해결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노력은 현재 1단계인 불능화 조치를 거쳐서 마지막 3단계인 비핵화로 가기 위한 신고와 검증의 2단계에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 난관의 돌파는 단순한 기술적 협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새 정치세력의 핵없는 신생존전략의 추진이라는 전략적 결단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다. 신생존전략은 핵무기 대신 재래식 무기체계를 기반으로 한 방어적 방위체제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북한은 오랫동안

평화체제 구축 방안으로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해 왔다. 그리고 논의의 핵심으로 적대관계에서 평화관계로의 대전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북미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군사동맹 해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그리고 주변 세력들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신평화체제 구상이 필요하다. 우선 핵대신 체제안보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복합 평화체제를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및 6자회담 등과 함께 구축해야 한다. 기왕의 국제정치사가 보여 주었던 평화협정의 비현실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체제 보장의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복합 보험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따라서 북미와 남북 간의 평화협정뿐만 아니라 중국의 보장이 대단히 중요하며 동시에 6자회담과 같은 다자보장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주한미군과 한미 군사동맹 문제는 북한의 전략적 결단과 함께 남북이 현재의 적대관계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대북 억제대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유지의 시각에서 새롭게 논의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 경제적 지원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다.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활용도 새로운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불안정한 김정일의 핵선군 수령체제가 조심스럽게 중국의 영향력이 유지되는 김정일 이후의 비핵 · 선경제 수령체제로 변화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미일과 중러를 동시에 활용하려면 고도의 복합 그물망을 쳐야만 가능하다. 반외세자주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북한 선진화를 위한 후계체제의 신생존전략은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전략적 결단과 함께 북한주민 2천만의 먹는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선군주의를 토대로 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4대진지론을 선경제주의를 토대로 한 4대진지론으로 바꾸는 것이다. 70년대 후반 개혁개방 이래 중국이 걸어온 길처럼 정치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국가 최우선 목표로 삼고 펼쳐져야 한다. 동

아시아에서 가장 뒤늦게 경제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선군정치가 보여줬던 계획경제의 기본 틀 속에서 제한된 시장경제의 도입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시장경제로의 변환을 위한 과도기로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혼합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북한형 개혁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현실화하려면 3중의 노력이 병행해서 진행되어야 한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진행하는 체제전환경제를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남북관계를 선군정치가 추진했던 계급공조를 토대로 한 민족공조 대신 한국의 혁명세력이 아닌 변환세력의 도움을 얻어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구시대적 구분을 넘어서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선진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을 동시에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공진화 노력

21세기 북한선진화의 첫 단추가 김정은 후계체제의 선군정치를 넘어선 신생존전략의 추구다. 그러나 이러한 세기적 실험은 북한 혼자만의 힘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동시에 한국과 주변세력의 공동진화(coevolution)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Garnsey and McGlade 2006). 지금까지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여러 모색을 해왔는데 크게 봐서 한쪽에 햇볕적인 노력이 있었다면 다른 한쪽에는 제재적인 노력이 있었다. 그런데 이 두 노력 중 어느 것도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햇볕정책론자들은 햇볕의 열매를 얻으려면 보다 오랜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쉽게 정책 전환을 해서 기대하는 성과를 못 얻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의 10년에 걸친 햇볕정책이 제한적인 교류협력의 확대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북핵실험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북한체제의 핵심인 핵선군정치에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아니

다. 북한은 전세계 어느 체제보다도 제재를 끝까지 지탱해낼 수 있는 체제이다. 따라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선군정치를 바꾸기는 어렵다. 북한의 선군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북한의 안과 밖에서 동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가능하다. 그런데 햇볕론은 북한의 내부 변화 가능성의 어려움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햇볕이 언젠가는 정치 및 군사 영역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낙관한다. 반대로 제재론은 모든 책임을 북한의 체제적 속성에서 찾고 이것만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두 요소가 서로 맞물려서 공동진화하지 않는 한 북한의 변화를 가져 오기는 어렵다.

북한의 김정은 후계체제가 선군 이후의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새 체제가 주관적으로 파악하는 안보와 번영의 질서를 새 정책 방향에 맞게끔 진화시키려는 당사국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북핵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선군정치의 과잉안보론이다. 그러나 김정은 후계체제가 지금과 같은 과잉안보론이 아니고 적정안보론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하는 경우에,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을 북의 새 체제에 적대적인 위협이 아니라 비적대적 모습으로 비치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군시대의 핵무기 이상으로 체제보장의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3중 복합평화체제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1차적으로는 남북 평화체제, 2차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동아시아 평화체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6자회담과 같은 다자 평화보장체제의 복합망이 필요하다.

동시에 새 체제가 추진하려는 선경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북한 번영 협력체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선경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외의 자본주의 '황색바람'이 북한경제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공포감의 해소가 가장 중요한 첫 단계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김정일 후계체제가

선군정치 대신 선경정치로 가지 못했는가를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새로 등장한 김정일 체제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통치"에 따라 결국 핵선군정치의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2012년에는 김정은 후계체제가 다시 잘못된 유훈통치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진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 선진화 공진전략 2단계 : 변환[2)]

북한이 궁극적으로 21세기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고 주인공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는 선진화 공진 전략 1단계의 10년만으로는 부족하다. 21세기 무대의 새로운 문명 표준을 최소한 충족시키기 위한 선진화 공진 전략 2단계로서 새로운 북한형 모델의 마련과 실천의 10년이 필요하다.

2단계 모델은 21세기 문명표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새로운 모델 속에서 북한을 선진화하고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고 동아시아와 세계와의 21세기 공진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새 모델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늑대거미 다보탑 쌓기"이며 분석적으로 표현하면 복합 그물망론이다. 일반 거미와는 달리 늑대거미는 거미줄을 치지 않는다. 거미줄에 걸린 먹이를 먹는 다른 거미들과 달리 늑대거미는 늑대처럼 먹이를 공격해서 잡아먹는다. 새 모델 주인공들의 변화를 늑대거미로 은유하는 것은 21세기 복합 세계질서의 주인공들은 생존을 위해서는 늑대와 거미의 두 기능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21세기 동아시아 질서도 근대적 세력균형 질서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거미줄이 이중으로 쳐지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양 초강대국이 아닌 비강대국들도 세력균형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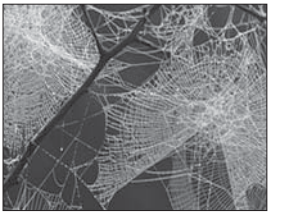
2) 북한 선진화 공진전략 2단계는 미래전략연구원 미래전략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하영선 2010).

줄서기의 노력과 함께 거미줄을 복합적으로 쳐서 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림 1〕의 왼쪽 그림은 흔히 볼 수 있는 단순그물망이며 가운데 그림은 거미들이 친 이중그물망으로 동아시아의 이중그물망과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거미들의 복합그물망으로 동아시아의 복합그물망을 은유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림 1] 단순그물망과 복합그물망

▲ 가. 단순그물망

▲ 나. 이중그물망



▲ 다. 복합그물망

다음으로 복합무대를 다보탑의 은유를 통해서 살펴보겠다. 안보와 번영이 19세기의 전통 무대였다고 하면 21세기에는 안보와 번영의 부국강병 무대와 함께 무분별한 성장으로 인한 지구적 피해를 막으려는 환경무대, 군사위협의 완화와 함께 드러나는 주인공들의 정체성 차이가 표출되는 문화무대가 아래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보탑 중심층 무대의 네 꼭지에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21세기 정보지식무대가 기층무대를 구성하고 있다. 경제가 아니라 정보 지식무대가 기층무대가 되는 이유는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 알 수 있다. 기원 전후 세계의 주요 종교가 등장했던 시기에는 종교가 당시 삶의 기층무대를 형성했으며, 근대 정치혁명의 시대에는 정치가 삶의 기반을 우선적으로 구성했으며, 산업혁명 이후 서양 자본주의의 폭발적 성장과 함께 경제가 역사의 기층무대 역할을 했다. 그런데 21세기는 첨단 과학기술의 혁명적 변화로 4대

중심층 무대에 대해 정보지식이 독립변수로써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륜부 상층의 통치무대는 여전히 최종 통제탑의 기능을 하고 있다. 결국 이렇게 다보탑처럼 아름다운 3층의 복합무대을 쌓지 못하고서는 21세기 무대의 중심에 설 수 없다.

[그림 2] 3층 복합 다보탑

3) "中共中央總書記胡錦濤在紀念改革開放30周年大會講話" 2008/12/18 (http://www.beijingreview.com.cn/document/2009-05/11/content_195251.htm). 영문버전: Hu, Jintao's speech at the Meeting Marking the 30th Anniversary of Reform and Opening Up (http://www.china.org.cn/archive/2009-05/11/content_17753659.htm).

한국은 근대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강 단계를 거쳐 21세기 그물망 국가들이 복합 무대에서 새로운 연기를 펼치는 세계무대로 향해 가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2008년 개혁개방 30주년 기념 연설에서 신중국 건설 100주년을 맞는 2049년의 미래 중국상(像)을 제시하고 있다.[3]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지난 30년은 1인당 국민소득을 3천 달러 수준으로 끌어 올려 초보적 경제문제를 해결한 시기였다고 한다면, 중국공산당 창설 100주년인 2021년에는 좀 더 높은 1만 달러 수준의 경제단계에 돌입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2049년에는 중국형 새 문명표준인 부강 · 민주 · 문명 · 조화 사회주의 현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모델국가명의 유난히 긴 이름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기존 선진국가들이 큰 매력을 느낄 만큼 주목받는 중국형 선진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구미의 중국 전문가들은 2049년의 중국에 대해서 성공론, 혼란론, 실패론 등으로 나눠져서 조심스러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발전 방향이 근대적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부강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나서 21세기적인 그물망 국가가 복합무대에서 연기를 펼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2049년 모델의 발전 방향은 북한 2032년의 선진화 모델 그리기에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늑대거미 다보탑 쌓기 또는 공진전략을 통한 복합북한 건설이라는 북한 선진화 모델은 험난한 길이다. 그러나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이다. 북한의 김정은 후계체제가 만약 앞으로 30년 동안 선군정치를 계속한다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거쳐 식물국가가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반대로 북한의 새 후계체제가 선진화 1단계로서 중국의 개혁개방 30년처럼 북한형 개혁개방을 추진해서 근대적인 기본조건을 갖추는 방향으로 매진하고 선진화 2단계로서 21세기에 맞는 복합 그물망국가를 추진할 수 있다면 남북한의 복합 그물망 통일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제기될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발전전개 방

향은 자주적인 노력만으로 이룰 수는 없다. 한국과 미국,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동진화 속에서만 가능하다.

북한선진화의 2단계는 1단계에서 완성한 부강국가를 기반으로 복합그물망 국가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우선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체제보장과 생계보장에서 보다 적절한 안보와 번영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동시에 4대 중심무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환경국가, 문화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21세기의 기층무대로 부상한 지식무대를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선군정치의 부작용으로 지나치게 비대화되어 있는 군사기술 및 지식무대를 평화기술 및 지식무대로 최대한 조속히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상층무대인 통치무대는 선군 수령통치에서 개발 수령통치의 과도기를 거쳐 민주 수령통치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선진화와 함께 남북은 근대적 만남을 넘어서서 복합의 새로운 방식으로 만나야 한다. 국가 대 국가의 만남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이 복합적 형태로 얽혀야 한다. 근대적 의미의 통일은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치, 군사, 경제문제이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복합 그물망의 모델에 맞게 남북관계를 진화시켜 나가려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복잡한 건축물을 구상해야 한다. 한반도의 지식무대를 어떻게 마련하고 또 중심층 무대인 안보, 번영, 문화, 환경은 어떻게 짜고, 그리고 마지막 통치무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전혀 새롭게 궁리해야 한다. 북한에 3층 복합탑 쌓기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는 남한과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의 3층 복합탑 쌓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 속에서 남북한은 21세기 복합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복합네트워크 통일과 동아시아

21세기 한반도의 통일이 복합네트워크 통일이어야 한다면 그와 함께 공동진화해야 하는 동아시아 질서의 모습도 대단히 중요하다. 동아시아공동체는 아직 갈 길이 먼 목표다. 공동체의 형성은 원칙적으로 가슴과 가슴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개별 국가들의 국가 정체성과 더불어 동아시아의 정체성 형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중적인 정체성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하며 우리 경우에는 통일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 한반도, 동아시아의 3중 정체성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형성도 초보 단계이다. 사회의 형성은 상호 이익과 가치를 위해 집단적 모임이 이루어 질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무대를 비롯한 제한된 영역에서 초기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동아시아는 먼 장래의 공동체와 국제사회를 마련하기 위한 '복합네트워크' 를 마련하려는 초보 단계에 있다.

복합그물망 짜기에서 한반도 미래 국제정치가 당면할 최대 숙제는 동아시아에 펼쳐질 미중질서 속의 한반도 생존전략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심스러운 '불륜의 국제정치' 가 불가피하다. 곧 미국과 일본이라는 조강지처를 품으면서 동시에 새 연인인 중국도 함께 품는 것을 말한다. 국제정치를 개인윤리적 시각에서 보면 비강대국은 살아남을 길이 없다. '불륜의 국제정치' 를 21세기 국제정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복합그물망치기의 국제정치다. 선진 남북한이 통일 거미줄을 치는 과정에서 병행해서 쳐야 할 가장 중요한 거미줄은 인접 그물망이다. 그 중에 가장 두꺼운 줄은 한미동맹이고 동시에 보조 거미줄이 한일 그물망이다. 한반도와 미국은 1950년대 냉전시대에 국가 생존을 위한 군사적 협력에서 시작되었고 21세기에 들어 전략동맹에서 복합네트워크적 동맹관계로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새로 치는 한반도와 중국의 연결 그물망이다. 현재 한중관계는 전략적 우호협력관계로 표현되고

있지만, 한중관계가 자리 잡은지 아직 20년이 채 안되었다. 한국과 중국의 정치경제체제가 상당히 다르지만 양국의 교역량은 이미 한미의 교역량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한반도와 중국의 상호의존성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Burt 2007; 2010).

물론 냉전시대에는 미국과 중국이 적대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한국이 동시에 미국,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21세기 한반도와 중국의 연결그물망은 반드시 한반도와 미국의 인접 그물망과 상호 모순된 것은 아니다. 21세기 복합화 시대의 거미줄은 복합적으로 쳐질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비대칭적 G2라고 생각하고, 중국과 한반도의 지정학 그리고 지경학적 특수성 때문에 교역과 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양국이 과거의 적대관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다만 한반도와 미국의 인접그물망이 한반도의 21세기 복합그물망의 기본 축으로서 계속 유지되기 바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와 미국의 상호 신뢰가 깨지지 않는 한도 안에서 한반도의 중국 거미줄 치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조심해야 할 것은 중국의 "2049 프로젝트"이다. 현재 중국은 국내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화평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발전이 기초에서 고급 단계로 넘어 가게 되면 '중국문명 표준론'의 등장 가능성이 있다. 그 이전에 중국이 동아시아와 지구 거미줄 속에 제대로 자리 잡도록 중국과 주변세력들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문명사적 숙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동아시아의 향후 30년은 '바쁜 30년'이 될 것이다.

21세기 복합화 시대의 미중관계는 냉전적 적대관계를 넘어서서 복합관계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한반도도 일차적으로는 상대적 쇠퇴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21세기 세계질서의 주도국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복합적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일본과 미래지향적 복합네트워크관계를 키워 나가면서, 동시에 한중의 전략적 우호협력관계를 21세기형 신동맹관계로 키워 나가

야 한다. 만일 미중 간에 제대로 거미줄이 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의 G2 질서가 부상하면 중간에 끼여 있는 한반도는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을 가까운 정도의 차를 가지고 모두 다 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인접과 연결 복합그물망을 서로 충돌하지 않게 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의 천하그물망 짜기

북한의 선진화 2단계 모델에서 선진 한국과 북한이 복합 그물망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천하 통일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 사고의 핵심은 자원력(resource power)의 상대적 열세를 네트워크력(network power)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최근 경영학 연구들은 네트워크력의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인접그물망을 촘촘하게 치는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그물망에서 냉전시대의 동맹이었던 한미관계는 21세기 복합네트워크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고, 한일 간에도 새로운 복합네트워크를 보다 촘촘하게 쳐야한다. 둘째로는 연결 그물망을 최대한 넓게 치는 것이다. 미국, 일본과의 기존 그물망을 넘어서서 중국에 복합 그물망을 넓히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어서 지구촌 및 사이버 공간에 연결 그물망 치기를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물망을 촘촘하면서도 넓게 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을 메우는 지식중개 그물망을 쳐야 한다. 거미줄에 구멍이 난 경우에는 공백을 정보와 지식으로 연결하는 중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동아시아 그물망 중에 북일, 북미관계는 네트워크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구조적 공백이 있으므로 한반도는 지식 중개인 역할을 통해서 네트워크력을 키워야 한다. 이러한 3중 네트워크 역량 강화로 상대적으로 제한된 자원력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 한반도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같은 자원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21세기 선진 남북한의 복합한반도가 상대적으로 자원력이

강한 주변 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련되고 현명한 네트워크력으로 힘을 보완해야 한다.

북한선진화 공진전략 2단계인 북한의 복합그물망 국가건설은 한반도, 동아시아, 지구, 사이버 그리고 국내 공간에서 벌어지는 5중 그물망력 강화 속에서 완성될 수 있다. 물론 네트워크력 강화만으로 재래식 천하통일을 할 수는 없지만, 21세기형 천하그물망을 짤 수는 있다. 근대 국제질서를 되돌아보면, 자원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가 세계질서의 중심이 되었던 경우가 있었다. 네덜란드가 좋은 예다. 네덜란드는 17세기 세계질서를 짜는 방식에서는 가장 첨단 수준에 있었다. 한반도는 좌우, 남북으로 나눠져 냉전기간 동안 치열하게 싸우느라고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남북한의 선진화와 남북통일을 21세기적 복합그물망 설계의 모습으로 완성하고 나아가 동아시아와 지구, 사이버 공간에서 공진전략으로 복합적 그물망 짜기에 성공한다면 한반도의 21세기 천하복합그물망 짜기는 새로운 문명표준의 가능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강성길. 2002.《선군시대의 조국을 가다》. 평양 : 평양출판사.

김봉호. 2005.《선군으로 위력떨치는 강국》. 평양 : 평양출판사.

김　영. 2005.《선군정치와 조국통일》. 평양 : 평양출판사.

전덕성. 2004.《선군정치에 대한 이해》. 평양 : 평양출판사.

하영선. 2000. "북한 핵 · 미사일의 주기적 위기."〈계간사상〉 여름 : 163-193.

_____. 2010. "한반도 복합그물망 통일과 동아시아."〈미래전략연구원 미래전략포럼〉. 서울. 7월. http://www.kifs.org/contents/sub3/forum.php-method=info&searchKey=&searchWord=&offset=&sId=2427.

하영선 편. 2006.《북핵위기와 한반도평화》.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Burt, Ronald S. 2007. *Brokerage and Closure: An Introduction to Social Capit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2010. *Neighbour Networks: Competitive Advantage Local and Persona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Garnsey, Elizabeth, and James McGlade, eds. 2006. *Complexity and Co-Evolution: Continuity and Change in Socio-Economic Systems.* Chaltenham, UK: Edward Elgar.